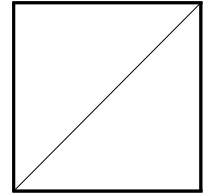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9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8. 26. (제15차)	

광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8. 26.

1. 의결주문

광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9.9.2.~2019.9.6. 기간 중 광주은행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견책’~‘감봉 3월’ 조치요구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련 법규 : <붙임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제7조(과태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별표3>(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별표]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2020.7.2) 심의필

<별지>

광주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직원에 대한 조치 : 견책 ~ 감봉3월

조치대상자	지적사항	조치내용	
		신분제재	금전제재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감봉 3월	과태료부과*
■ ■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견책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2019.9.16.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자진납부 완료하였음(「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중 '29. 금융실명제 관련사항'의 '자'목)

○ 조치사유: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2, 제7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조치사유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위 법령해석('12.7.10.): 금융거래 실명확인시 가족관계확인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함

① 前 @@@지점(現 ○○○지점) 행원 ◆◆◆은

2015.9.30. ###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1건, 100백만원)를 가족대리인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본)를 제출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前 @@@지점(現 ●●지점 부지점장) 차장 ■■■는

2015.9.30. ###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1건, 100백만원)를 가족대리인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행원 ◆◆◆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본)를 제출받았는데도 책임자로서 실지명의 확인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계좌 개설을 승인하였음

< 예금계좌 개설 내역 >

(단위 : 백만원)

개설지점	계좌번호	명의자	개설일자	개설금액	신규/재예치	행위자	감독자
@@@지점	@@@-@@@-@@@ @@@@@	###	2015.9.30.	100	재예치	◆◆◆	■■■

※ 금융실명법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과태료 부과 제척 기간(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경과가 임박하여 2019.9.11. 금융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19.9.16.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라 대상자들은 과태료를 납부하였음

< 관련 법규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2, 제7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붙임1)

관련 법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직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나. (생략)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생략)

[본조신설 2014.5.28.]

부 칙 <법률 제12711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단서 생략)

2.~5. (생략)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생략)

2.~5.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만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금융업관련법상 벌칙,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기관경고를 받는 금융기관의 관련임원에 대하여 당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거나 경고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라. (생략)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생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3>

금융업종별 ·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공통부문

I -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전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5. 가중 및 감경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나.~라. (생략)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29. 금융실명제 관련사항

자.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실명확인 및 비밀보장 관련 유권해석 통지’(은행과-1520, 2012.07.10.)

- 가족대리시 필요한 “가족관계확인서류*”는 i)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ii) 계좌 개설 당시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재된 것만 인정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지자체가 발급하고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급여증, 가족관계가 표시된 구 의료보험증

(붙임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광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9.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 직원(1명) : 감봉 3월,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직원(1명) : 견책, 과태료 20만원 부과 ○ 직원(1명) :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직원(1명) : 과태료 40만원 부과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기관	○ 과태료 500만원 부과 ○ 개선사항 2건 ○ 경영유의사항 1건

※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도 통보하였음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 하여야 하는데도

광주은행 @@@지점에서는 2013.9.16.~2015.9.30. 기간 중 ### 및 \$\$\$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6건, 510백만원)를 가족대리인 %%(### 및 \$\$\$의 모)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1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본)를 제출받고 계좌를 개설(5건)하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 법규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2, 제7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제13조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나. 개선사항

(1) 가족대리인 계좌개설 신청시 고객확인 절차 개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시 고객확인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가족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명의를 이용한 차명 거래 등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임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객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심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족대리인의 신청에 따른 계좌 개설시 비과세증여한도를 초과하는 거래 등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련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가족대리인 계좌개설 신청시 증빙서류 검증절차 개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내규 「예금 업무지침」 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3억원 이하의 계좌 개설시 실지명의 확인을 실무담당 직원이 전결로 수행하고 있고 증빙서류 징구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가족대리인 신청에 의한 계좌 개설시 유효 기일이 경과된 서류를 징구하거나 징구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가족대리인의 신청에 따른 계좌 개설시 고객의 실지명의 확인 및 증빙서류 징구의 적정여부를 책임자 승인을 거쳐 확인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기관의 행정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증빙서류가 자동으로 수집·검증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등

다. 경영유의사항

(1) 대리인 신청 계좌개설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은행내규 「자점감사지침」 제10조 등에 의하면 각 영업점의 일일 감사자는 감사통할책임자를 보좌하여 자점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점감사 지침」에 대리인 신청에 의한 계좌 개설시 실지명의 확인 및 증빙서류 징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영업점에서 일일감사 수행 과정에서 가족대리인 신청에 의한 계좌 개설시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대리인 개설 계좌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자점감사 감사항목에 대리인(제3자, 가족) 신청에 의한 계좌 개설시 관련 증빙서류*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자점감사 전담역의 영업점 순회 감사시 고객확인 의무 이행 및 관련 증빙서류 징구의 적정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등 대리인 신청에 의한 계좌 개설 업무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특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76	02-3145-7205